다산포럼

농촌기본소득을 생각한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 주자들이 논쟁을 벌일 만큼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일부에서는 안심소득이나 공정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음(陰)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이 다채롭게 제시되기도 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아예 반대를 외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실시한 청년 기본소득과 오는 10월 시작되는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올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하는 농촌기본소득까지 기본소득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돌이켜 보면, 기본소득 논쟁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복잡한 복지 지출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일원화하여 지불하자거나, 토지나 공기 등은 본래 모두가 물려받은 것 즉 '공유부'이니 모두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이차대전 이래 최근으로 가까워지며 산업 생산성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쓸 만한 일자리는 줄어들어 그 분배 과정이 매우 불균등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급격히 떠오른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 위기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확대시켰다.

최근 논쟁의 중심에는 단연코 재원 마련이 있다. '누구나' 누려야 한다는 속성 때문에 재원이 대규모로 필요하거나 일인당 배분액이 엷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소득을 단기적 과제가 아닌 중장기적 과제가 되게끔 하는 이유이다. 백두산 천지가 올라가야만 할 목표라면 계속하여 꾸준히 가되 때로는 돌아가거나 쉬었다 가면 된다. 자로 재어 줄 긋고 여행을 할 수는 없다.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때로는 청년이나 장애인 혹은 예술인부터 시작하거나, 작은 금액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또는 농민이나 특정 농촌으로부터 '시범' 또는 '실험'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지원뿐 아니라, 주택이나 기초적인 금융서비스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노년층·산모 등 돌봄 서비스도 국가가 체계를 세워서 수행해야 한다. 이런 국가 돌봄 책임 제도나, 예컨대 청년 고용보장 제도도 넓게 보면 기본(universal basic)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본소득 외에 기본 서비스도 가능한 것이며, 이런 점에서 경기도는 이미 기본주택이나 기본금융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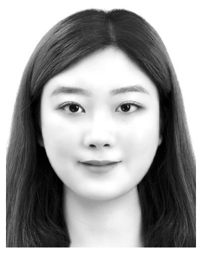
경기도가 구상하는 농촌·농민 기본소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 전단계인 범주형 기본소득에 속하지만 목적은 조금 다르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유도해 인구 소멸을 완화하려는 목적까지 가지고, 올 하반기에 1개 면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시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1인당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농사직불금 제도가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한다. 2ha 이상을 가진 농민은 전체의 10퍼센트도 안 되는데 전체 직불금의 75%를 받아서,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농민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농촌 기본소득은 단지 소득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지금, 소득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인구의 유입은 교육·의료 등 인프라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그동안 와해되던 농촌 커뮤니티도 살려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이다.

물론 농촌·농민 기본소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거나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제조업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족하거나 느리더라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을 필요가 있다.

청춘 톡톡

웹소설, 재미 뒤에 숨겨진 검은 이면



조서희
광주대 문예창작과 2학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예창작과 학생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너도 한번 막장 드라마 써 봐'였다. 한 회당 수천만 원을 버는데 너도 저 정도는 쉽게 쓸 수 있지 않느냐며, 시크하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문예창작과 학생에게 드라마 쓰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웹소설을 쓰라고 한다. 실제로 내 주변에도 본업을 가진 채 웹소설 작가로 성공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TV에 송출되는 드라마와 달리 웹소설은 비교적 데뷔의 문턱이 낮다. 드라마는 웹소설과 달리 방송국의 어느 특정 채널을 보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해진 시간에 다소 일방적인 시청을 강요한다. 하지만 웹소설은 화면에 띄워 놓기만 하면 편리한 시간에 공간적인 제약 없이 보고 싶은 사람들만 이용한다.

웹소설 작품의 흥행은 클릭 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공간 확장이 가능한 온라인상에 올라온 웹소설 작품의 흥행 여부에 대해, 회사의 부담은 실시간 경쟁하는 드라마에 비해 덜한 편이다. 수익 분배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웹소설은 일정 수준의 적은 원고료만 보장하고 작가의 수익을 전적으로 유료 구매한 독자에게만 맡겨 버린다.

그렇다면 정말 웹소설 작가가 되기는 쉬울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작가가 되는 것 자체는 쉽지만, 일정하게 높은 수익을 올리는 작가가 되기는 쉽지 않다. 웹소설 시장은 더는 블루오션이 아니다. 대형 웹소설 플랫폼만 해도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조아라' '문피아' 등 여러 개다.

이 중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하루에 수백 개의 웹소설이 올라온다. 그중에는 웹소설이 수면 위로 나오기도 전 출판 소설로 유명했던 작가들의 차기작도 있으며, 이미 SNS나 개인 홈페이지에서 '팬픽'이나 다른 작품들의 '패러디 작품'을 연재해 수많은 팬덤층을 가지고 웹소설로 진출한 신인 아닌 신인 작가들도 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작품들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데뷔한 작가가 독자들의 눈에 띄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다.

독자들이 웹소설 앱에 들어가 메인을 훑어보는 몇 초, 그 안에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홍보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웹소설의 제목과 표지들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예전과 같았으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로 끝나도 됐을 제목들이 '세계 최고의 악당에게서 살아남은 아이, 갑자기 마법사가 되다?'와 같은 식으로 변화됐다.

몇 자 안 되는 제목 안에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야 독자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독자들은 해리포터가 악당에게서 살아남은 특별한 마법사라는 것을 모른 채 자극적인 제목의 작품을 이용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제 문예창작과 학생에게 막장드라마 대신 웹소설을 쓰라고 말한다. 하지만 드라마를 좋아하는 동시에 문학을 배우고 창작하는 학생의 관점에서 막장 드라마 작가와 웹소설 작가는 결국 똑같은 직업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높은 완성도로 시즌2까지 제작된 '비밀의 숲'보다 일각에서는 너무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냐며 우려하는 '펜트하우스'의 화제성과 시청률이 더 높은 것처럼 웹소설 또한 점점 자극적으로 된다. 이유는 깊은 이해를 하지 않는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자 작품의 작가들이 돈도 더 많이 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아직도 거리에는 '배고픈 예술인'이 넘쳐나는 현실이다. '스낵 컬처'가 아닌 '순수 예술'에도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대중들의 관심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를 당장 '심심풀이 땅콩' 즉, 순간적인 소비로 보는 근시안적 시각보다 시간이 지나도 예술의 가치로 평가하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잘 만든 드라마인 '비밀의 숲'이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펜트하우스'보다 더 높은 시청률이 나오는 세상을 위해서 말이다.

기 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황지유
동신대 중국어학과 교수

걸인도 QR코드를 내밀며 구걸을 하는 나라, 모바일 결제 한 번으로 장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결제와 배달이 한꺼번에 가능한 나라, 모바일앱 '디디추싱'이 아니면 택시를 부르기 힘든 나라. 이 모두는 모바일 결제가 80% 이상 구현되어 디지털 화폐와 인공지능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다.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네트워크와 모바일 결제, 핀테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홍수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도 전에 거대한 물줄기에 떠밀려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흔히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 혁신을 뜻한다. 또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는 여러 분야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다가오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4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도 4차 산업의 선도 국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교역량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은 매우 빠르게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세계 2위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거대한 기반 시장에 힘입어 BAT로 일컬어지는 바이두(Baidu)·알리바바(Alibaba)·텐센트(Tencent) 등 모바일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이런 기업들의 빠른 행보를 보면 '지금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승자 독식의 시대는 지나고,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현재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인력수급'이라고 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나 중국 등 몇몇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처해 있는 어려움이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많은 대학에서 AI 인재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대학 AI 인재 국제 양성 계획'과 '대학 AI 인재 혁신 행동 계획'에서는 대학 과학기술 혁신 및 단과대 시스템 완성과 인재 양성 시스템 개선을 통해 AI 인재를 양성해 내겠다고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주요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열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중국 대학생들은 취업하는 것을 '다꿍'(打工) 즉, '남을 위해 일하는 것' 또는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만큼 창업을 통해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도전정신이 학생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대학과 사회 풍토가 국가적 혁신 정책 또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과 만나서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아니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사람'을 길러내는 대학은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까? 우리 대학에서도 사회의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개설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수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나의 산업군이 아닌 모든 산업에 녹아들어 있는 '요소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은 이공 계열에서 담당해야 하겠지만 그 '콘텐츠'는 인문학, 언어학, 의학, 경영학 심지어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이라는 열린 공간은 융복합 교육을 강화하고, 혁신과 창의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의 산업 육성 방향이나 광주의 '인공지능 사관학교' 등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이 산업의 흐름과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社說

대선 연계 호남 미래 발전 전략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어제 정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오는 11일 예비경선을 앞두고 이뤄진 첫 후보 단일화다. 이에 따라 대권 레이스를 뛰는 민주당 예비 후보는 9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 정 후보에게 힘을 보태 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도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다"며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단일화 결정으로 반 이재명 전선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이제 시선은 이낙연 후보로 쏠린다. '호남 대표' 타이틀을 두고 이낙연·정세균 후보의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두 후보가 최근 회동을 가진 것도 이런 관측을 부추긴다.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민주정부 4기의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시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향후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반이재명 연대'의 결속을 다지는 공동 행보를 이어 간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 출신 박용진 의원도 본선 진출이 유력해 보인다. 이처럼 이번 대선 후보 중에는 호남 출신이 세 명이나 되지만 사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이곳에서는 마땅한 후보조차 나온 적이 없었다. 따라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호남 출신 대통령'에 대한 열망도 커지고 있다.

어찌 됐든 우리 지역민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을 각종 지역 현안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적극적 공조를 통해 호남의 10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 발전 전략을 후보들의 공약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교생 생명 앗아간 학교폭력 조사 철저히

광주 지역의 한 고교생이 또래 학생들의 집단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특히 학교폭력이 장기간 지속된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학교 측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주 지역 일반고 2학년인 A(17)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광산구 어등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이 이날 이틀째 치러지는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학교에 가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학교폭력 피해 내용이 담긴 유서와 동영상을 남겼다. A군은 유서에서 '학교폭력으로 힘들지만 너희들 도움으로 지금껏 버틸 수 있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친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적어 고마움을 표현했다. 또 동영상에는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놀이를 빙자한 괴롭힘에 시달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A군은 기말고사 전날에도 교실로 찾아온 학생들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등교하는 날이 많지 않았는데도, 쉬는 시간이면 이들이 A군을 찾아와 '샌드백 치듯 때렸다'는 학생들의 증언도 나왔다.

게다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학생들이 A군과 같은 중학교 출신이어서 이들의 폭력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 관계자는 "A군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뒤늦게 유서 등을 발견한 A군의 부모가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학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차제에 학교폭력의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고,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대응도 면밀히 살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선진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운크다드)가 최근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32개국)으로 변경했다. 1964년 운크타드 창설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한다. 국민적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밖의 여러 기구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지 이미 오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991년에, 세계은행에서는 1996년에 선진국으로 지정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소득 회원국(37개국)인 것은 물론 개발원조위원회(23개국)와 파리클럽(22개국) 회원국이기도 하다.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다.

각종 통계 및 지수도 선진국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조5512억 달러로 세계 10위며, 수출은 지난해 5125억 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1497달러로 세계 26위이며, 교육지수·기대수명지수·국민총소득 평균으로 산출하는 UN의 인간개발지수(HDI)는 지난해 23위였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등 세계 166개 국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승인하고 있다. 사실상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한데 대한민국의 선진국 분류에 대해서 유독 우리나라만 인색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는 지난 50년 동안 급속 성장함에 따라 선진국으로의 체감도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동양의 작은 나라로서 서방을 대상으로 한 미묘한 '선진국 콤플렉스'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분단국가로 세계열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 빈부 격차, 치열한 경쟁 체제, 긴 노동시간 등도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 보면 소득, 치안, 교육, 보건의료, 문화, 사회적 투명도, 민주주의 체제 등에서 대한민국만 한 나라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이제는 한숨 돌리고 뒤를 돌아보며 서로를 배려하는 삶의 여유를 가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